

## 민선 6기 복지정책방향

류진석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I. 들어가며

민선 6기가 출범한지 3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다. 대전광역시 민선 6기의 기본적인 시정방향은 시민중심의 가치를 최우선하면서 소통과 공감 그리고 경청을 통해 시민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추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시정방향에 기초하여 각 분야별로 정책추진의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고, 복지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복지정책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생활안정성, 시민행복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복지정책을 지역별로 어떻게 구현하고 실천하는가에 따라 지역주민의 삶의 모습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사실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은 대부분 법정사업 또는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로 시행되고 있으며, 자체사업의 비중은 극히 낮은 편이다. 중앙정부 복지사업의 증가와 함께 이에 따른 재정 매칭시스템으로 지방복지재정의 부담증가, 복지가용재원의 한계 등으로 지역의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지방정부 고유의 자체사업을 실시하기란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여건에서도 여전히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복지사업에 대한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왜냐하면 표준화되거나 획일적인 복지서비스 형태로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고, 고령화 및 저출산, 가족기능의 변화로 보육, 돌봄, 일과 가족의 양립문제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복지의 지방화’라는 용어가 말해주듯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다. 복지욕구나 지역사회문제는 지역 및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표준적인 복지서비스 외에 지역사회 중심의 차별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독자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민선 6기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면서 지역복지의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켜야할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민선 6기 대전시장은 ‘구석 구석 살피는 복지’를 정책목표로 8대 분야 34개 과제를 공약하였다. 취임 후 약속사업의 검토 및 타 후보의 공약수용 등을 통해 지난 8월 22일 ‘시민과의 약속사업 실천 계획보고회’에서 복지분야의 중점과제 10개, 일반과제 13개로 총 23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당초보다 약속사업의 과제가 줄어든 것은 유사사업의 통합, 기존 추진사업에의 반영 등의 이유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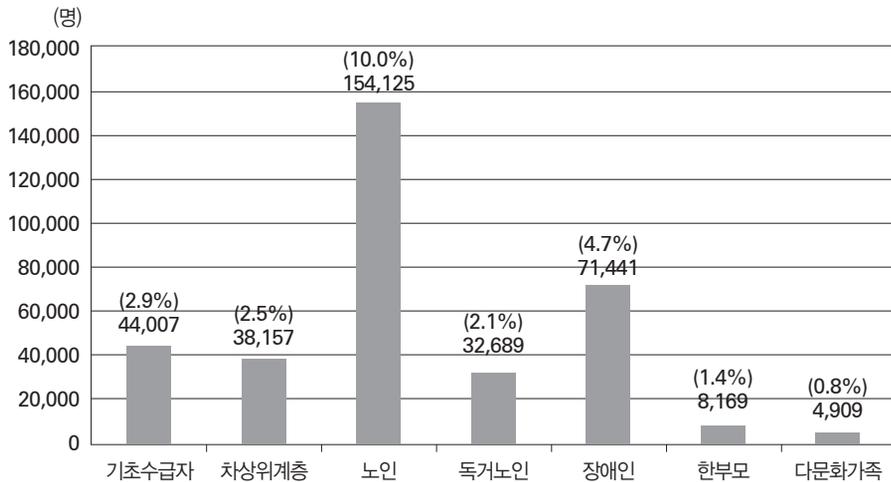
민선 6기에서 실행할 복지분야의 23개 약속사업은 그 내용 및 추진성과에 따라 앞으로 4년 동안 대전의 복지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민선 6기의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내용, 그리고 정책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 개략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II. 대전광역시의 복지여건 및 전망

현재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 복지여건 및 전망은 그리 밝은 편은 아니다. 왜냐하면 저성장의 장기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의 압박, 고용안정성의 위협 및 사회불안 심리의 확산, 지방복지재정의 부담 등으로 지방정부의 복지재정확대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책임 및 역할은 어려운 복지여건에서도 시민의 복지수준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할 것인가에 집중해야할 것이다. 현재 주어진 복지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복지확대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대전광역시 복지여건 및 전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1. 복지여건 : 복지대상자, 복지재정 그리고 복지시설의 현황

먼저, 2014년 5월 현재, 대전시의 사회복지대상자 현황을 [그림 1]을 통해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44천명으로 대전시 전체인구의 약 3%를 차지하고 있고, 장애인은 71천명(4.7%), 차상위계층 38천명(2.5%),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0%인 154천명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서비스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대상계층, 즉 복지사각지대를 고려할 경우에는 실질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복지대상자의 수는 확대될 것이다.



[그림 1] 대전시 사회복지대상자의 현황(2014. 5. 30 기준)

주 : 각 대상자의 ( )은 전체 인구 대비 비율임. 단, 한부모 및 다문화가족의 단위는 세대이며, ( )은 전체 세대 대비 비율임  
 자료 : 대전광역시(2014a)

다음으로, 세출결산액을 기준으로 사회복지분야의 지출현황을 [표 1]에서 보면, 2013년 8,826억원으로 전체예산의 3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도별 복지지출추이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 현재 대전시의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은, 11,920억원(일반회계 10,126억원+특별회계 1,794억원)으로 시 예산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복지분야의 지출추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새로운 복지제도의 도입에 따른 결과이며, 향후 지방복지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표 1] 대전광역시 사회복지분야 지출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명)

구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A)	2,286,320	2,197,916	2,355,770	2,380,298	2,828,889
사회복지분야(B)	606,421	618,126	676,909	754,239	882,653
사회복지분야비율(B/A)	26.52	28.12	28.73	31.69	31.2
인구수(C)	1,484,180	1,503,664	1,515,603	1,524,583	1,532,811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 천원)	409	411	447	495	576

자료 : 대전광역시(2014c), 2014년도 지방재정공시.

한편, 사회복지시설의 현황을 보면, 2014년 5월 현재 생활시설 236개소, 이용시설 374개소로 전체 583개소에 5,439명이 종사자가 활동하고 있다. 사회복지대상자별로 시설 현황을 보면,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시설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여성, 정신요양, 사회복지시설이 양적으로 저조한 수준이며, 대상자별 차이는 대상자별 인구분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복지시설의 확충은 미래의 수요 및 대상자의 규모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2] 사회복지시설의 현황(2014. 5. 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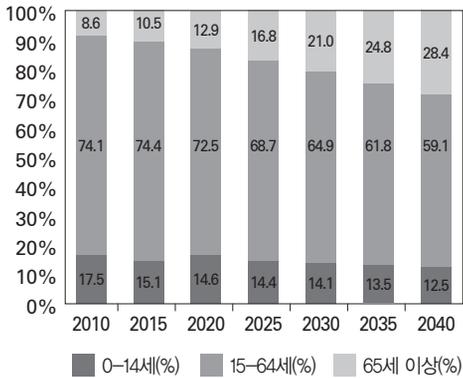
구분	계	사회 복지관	부랑인 (노숙인)	지역자 활센터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정신 요양	사회 복귀
계	583	21	8	5	203	125	10	187	4	20
생활시설	236	-	5	-	113	58	10	32	4	14
이용시설	347	21	3	5	90	67	-	155	-	6
기타시설	경로당 786, 노인교실 37, 노인보호전문기관 1, 푸드뱅크 9, 푸드마켓 8									

청소년복지시설 현황 : 6개소(청소년쉼터), 어린이집: 1,680개소(보육교직원 9,44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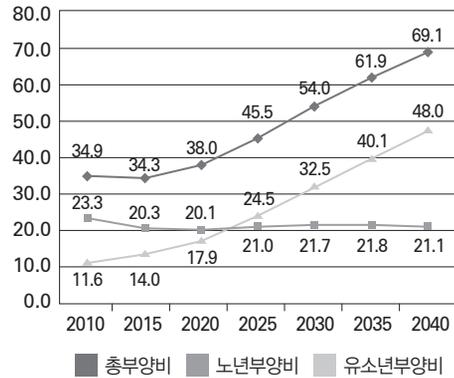
자료 : 대전광역시(2014a).

## 2. 복지수요의 전망

첫째, 대전시의 인구규모는 2014년 7월말 현재 153만명이며,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구구조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2020년 12.9%, 2030년 21.0%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그림 3]의 인구구조전망에 따른 부양률 추이를 보면, 노년부양비 및 총부양비는 고령화의 여파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반면에 저출산에 따라 유년부양비는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는 새로운 복지수요를 창출시킬 것이며 다양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 대전 인구구조 전망



[그림 3] 대전 인구구조 전망에 따른 부양률 추이

주 : 1) 총부양비=유소년부양비+노년부양비 2) 유소년부양비=(0-14세인구) / (15-64세 인구)\*100  
 3) 노년부양비=(65세이상 인구) / (15-64세 인구)\*100

자료 : 통계청, 2012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대전시의 경우 2020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노년부양비가 유년부양비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여성의 사회참여 제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 노인복지서비스 확충 등 제도적 대응기반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할 것이다.

둘째, 사회·경제적 양극화현상의 심화 및 고용불안의 증대로 인한 복지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전시도 일반적인 현상이며, 지역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예컨대 2014년에 실시한 대전시 시민복지욕구조사에서 복지우선 순위사업으로 일자리창출 및 고용서비스강화가 1순위로 나타난 점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대전복지재단, 2014). 따라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빈곤화 및 고용불안에 따른 위기가정 및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체계 수립,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저출산·고령사회 및 개인주의 가치관 확산 등은 새로운 복지수요를 증대시킬 것이다. 가족구조의 핵가족화, 이혼율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다문화 사회 등으로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및 사회적 소외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족해체, 노인부양 등 생애주기에 걸친 복지욕구의 증가에 효율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 Ⅲ. 민선 6기 복지분야 약속사업의 주요 특징 및 내용

대전시의 복지여건 및 향후 전망을 기초로 민선 6기 복지정책의 비전은 [그림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구석구석 살피는 복지’를 통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건강한 복지도시로 집약할 수 있다. 이러한 비전설정의 이유는 복지정책이 추구하는 바가 전시성 및 형식성을 탈피하고, 하드웨어보다는 실질적인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식의 변화로도 모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인구구조의 전망 및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대전을 보다 살맛나는 도시로 발전시키는데 있다.

<b>비전</b>	‘구석구석 살피는 복지’ :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건강한 복지도시			
<b>기본 방향</b>	사회적 약자의 복지확대 및 기반 구축	의료이용의 형평성 및 건강권 증진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서비스 확대	일자리 창출 및 양성평등 실현
<b>정책 과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복지기준선 제정</li> <li>• 발달장애인 현 위치 확인서비스 시행</li> <li>• 폭력피해자 인권보호</li> <li>• 사회복지 종사자,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시립의료원 착공</li> <li>• 여성장애인 지정병원 운영</li> <li>• 소아중증장애인 낮 병동 설치</li> <li>• 친환경아트피 전문 어린이집 운영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의 공공성 강화</li> <li>• 자율적 공동육아 공동체 육성</li> <li>• 대전청소년 위캔센터 설치 운영</li> <li>• 대전이모작지원센터 설치</li> <li>• 안심카페 운영</li> <li>•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노인, 여성 일자리 창출</li> <li>• 성 주류화 정책 실행</li> <li>•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li> </ul>

[그림 4] 민선 6기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과제 : 약속사업을 중심으로

이러한 비전에 맞게 민선 6기 복지분야의 약속사업은 첫째, 대전사회복지기준선 마련으로 사회적 약자의 복지확대 및 기반구축, 둘째, 대전 시립의료원의 건립으로 의료이용의 형평성 및 건강권 증진, 셋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넷째, 일자리 창출 및 양성평등 실현을 주요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면관계상 복지분야 약속사업에 제시된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대전시민경청위원회, 2014; 대전광역시, 2014b).

### 1. 대전사회복지기준선 제정으로 시민복지의 중장기 추진목표 설정

대전사회복지기준선의 제정은 시민의 최저생활 보장과 평균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득, 주거, 돌봄, 의료, 교육 등의 영역별 정책기준선의 설정 및 대전의 특성에 맞는 시민복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즉, 대전시의 경제·사회적 발전수준을 고려하여 개인이 처한 소득, 주거 등 환경에 관계 없이 대전시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복지기준을 설정하여 적절한 삶을 보장하는 데 있다.

대전사회복지기준선 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대전시 복지예산이 시 재정의 35%를 차지하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실정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 복지제도의 특성상 복지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복지시책은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나, 대전시의 경우 이를 위한 세부적인 정책기준 설정이 부재한 상태이다.

특히 대전사회복지기준선 설정은 학술적 용역결과에 의존하기 보다는 제정과정에서의 시민참여 및 기준선 도출과정에 대한 시민합의, 민관협력이 보다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기준선 마련 시민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 산하에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의 「영역별 전문TF」 팀을 설치하고, 기준선 제정을 위한 실태조사, 영역별 분과회의, 토론회 및 시민원탁회의의 개최 등을 통해 대전의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기준선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전사회복지기준선에 따른 중장기 추진목표의 설정 및 종합실행계획의 수립, 조례제정(정비)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 2. 의료불균형 해소와 시민건강권 증진 : 대전 시립의료원의 건립 및 건강서비스 확충

민선 6기를 대표하는 복지분야의 약속사업은 의료서비스 이용의 접근성 제고 및 동서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대전 시립의료원의 건립을 들 수 있다. 취약계층 및 일반시민의 미충족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존재하고, 의료취약지역의 접근성 강화와 의료이용 사각지대의 안전망 역할 수행, 시민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대전 시립의료원의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 시립의료원의 건립배경을 보면, 타 시도에 시립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립병원이 설치되어 있지만, 대전은 부재한 실정이다. 대전의 경우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이용의 구별 편중현상 또는 동서격차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이용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구지역의 경우 병상수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 낮고, 의료취약계층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시립의료원 건립은 과거부터 추진을 시도하였으나, 재정여건 및 정책의지 등의 문제로 유보된 상태였다. 2013년에 ‘지역 공공의료 확충 타당성 조사’라는 용역을 실시하여 시민공청회, 최종용역보고회(2014. 2)를 통해 건립의견이 제시되었다. 시립의료원의 건립은 의료수요자 및 공급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할 과제이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정은 필수적이다. 민관협력 및 시민의 합의과정을 통한 시립의료원 건립추진의 절차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민중심’이라는 민선 6기의 시정 특성을 발휘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전시립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립의료원 건립 타당성에 관한 시민합의, 자원계획 및 사업방식결정, 운영방안 등에 관한 종합적인 건립추진계획을 수립해야할 것이다.

또한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한 약속사업으로 여성장애인 지정병원 운영, 소아중증장애인 낮 병동 설치, 친환경아토피 전문 어린이집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여성장애인 지정병원 운영은 여성장애인의 신체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병원이 미흡한 실정을 고려하여, 여성장애인 지정병원 1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각 자치구별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소아중증장애인 낮병동 설치 및 운영확대는 소아중증장애인의 조기재활치료를 통한 자립기회를 확대하고,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여 가족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다. 친환경 아토피 전문 어린이집 운영은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동과 부모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친환경 어린이집을 각 자치구별 1개소 지정운영을 목표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 3. 생애주기별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복지 확대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복지확대를 약속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아동보육 및 육아를 위한 사업으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확대, 자율적 공동육아공동체 육성 등을 들 수 있다.

대전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28개소로 전체 어린이집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평균 5.3%에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여전히 수요자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의 공급부족, 보육서비스의 품질제고와 부모 보육 불안 해소를 위한 안심보육 기반 구축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이다. 그리고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육의 질 향상 및 공공성 확보를 목표로 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민선 6기 동안 20개소 이상으로 확대할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 및 직원의 상해보험료 지원, 저소득 아동지원 확대,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확대 지원 등을 내용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대전청소년위캔(WE CAN)센터의 설치운영이 대표적인 정책 과제이다. 2014년 6월 현재 대전지역의 경우, 학교중단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안 학교 운영비 지원은 실시하고 있으나, 청소년 직업체험 전담기관은 부재한 실정이다. 서울의 하자(HAJA)센터처럼 다양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직업체험 공간 및 프로그램의 제공, 청소년 창작 및 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제공,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및 취업상담, 창업과정 지원, 마을과 지역을 바꾸는 청년리더 양성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대전청소년위캔센터의 설치를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외롭지 않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안심카페 운영,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 경로당 운영비 확대, 대전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노인의 건강, 가족 및 정서적 문제 등 노인문제 전반에 대한 전문상담을 통해 노인의 권익보호 및 원만한 노후생활 영위를 목적으로 노인 상담이 용이한 복지관 등에 안심카페(전문상담소)를 설치하여 상담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다. 그리고 베이비부모 세대 은퇴 등 급증하는 신노년층을 위한 사회공헌·창업·재취업 등의 프로그램 운영, 제2의 인생설계 및 사회참여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대전이모작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안락하고 보람찬 노후생활을 지원할 것이다.

#### 4. 사회적 약자를 적극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의 확충 및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처우개선

발달장애인 현 위치 확인서비스 시행, 폭력피해자 인권보호 등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현 위치 확인서비스 시행은 발달장애인의 위치추적을 통한 실종예방, 가족의 걱정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위치 확인 단말기 구입 및 사용료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장애인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폭력피해자 인권보호의 목표는 폭력피해자를 위한 신속하고 통합적인 초기대응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자립지원 등 피해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인권보호를 강화하는데 있다.

한편, 지역복지역량 강화 및 서비스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처우개선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시책과 연계한 각종 복지사업은 다양화되고 양적 증가 추세에 있으나, 사회복지종사자 및 보육교사의 보수나 근로·업무환경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분야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전문성 강화에 부합하는 급여체계의 현실화 및 근무개선 등 다각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5.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양성평등 실현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발굴과 지원확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확대를 추진할 것이며,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 일자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일자리 개발, 취업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연소노인이 고령노인 및 홀로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서비스를 새로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여성일자리 창출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지원, 중부권 최대의 여성취업 및 창업 박람회 개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취업지원기관의 역량강화와 함께 유형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여성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성주류화정책의 적극적인 실행, 여성친화도시조성 및 여성가

족정책센터의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제도, 성인지교육 등 성 주류화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인지 예산과 연계하거나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는 등 성 주류화정책의 실효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지역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자치구에서 추진의지가 높지가 않다. 2018년까지 모든 자치구(2013년에 서구청 지정)로 확대 지정받을 수 있도록 재정인센티브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 Ⅳ. 정책추진 시 고려사항

민선 6기 복지분야의 약속사업은 ‘안전한 대전, 따뜻한 이웃, 건강한 시민’이라는 3대 시정방향과 부합하면서, 시민모두가 행복한 대전을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다. 그러나 복지분야 약속사업은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복지분야 약속사업에 대한 기본가치의 공유가 전제되어야 한다. 단순히 약속사업의 이행성과에만 매몰되지 않고 복지분야의 약속사업이 왜 필요하며 추진하려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선거과정에서 제시한 약속사업의 추진이라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왜냐하면 소관부서의 약속사업에 대한 인식 및 추진의지가 명확해야 상향식 정책소통이 가능하며, 시민적 합의에 기초한 정책추진의 동력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복지분야 약속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의 설정 및 실천이행로드맵을 통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업의 내용에 따라 재정소요정도 및 추진과정의 어려움 등으로 약속사업별로 실행정도를 단순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시민의 욕구에 기반하거나 미래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시급성,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속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하며, 사업의 실천이행을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시민참여 및 민관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복지거버넌스 구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실현은 시민참여와 민관협력을 특징으로 하는 복지거버넌스의 효율적인 운용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서비스의 효과성 증진 및 효율화를 위해서

는 양자의 협력은 불가피하며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이러한 협력적인 관계 형성 및 시민참여를 시스템으로 구축할 책임은 역시 공공부문이 담당해야할 몫이다. 더구나 ‘소통과 참여’라는 민선 6기 시정특징이 복지정책의 추진과정에도 반영되기 위해서는 실천현장을 강조하는 복지행정, 수요자의 욕구반영 및 의견수렴, 민관협력의 활성화 등 시민중심에 기반을 두고 민선 6기의 약속사업을 추진해야할 것이다.

넷째, 재정투자계획의 실현가능성을 확보해야한다. 복지분야의 약속사업은 선언적인 정책구호가 아니기 때문에 재정이 충당되지 않고서는 실현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복지분야의 약속사업이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소요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복지분야 약속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우선적으로 재정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복지재정확보에 대한 확고한 정책의지를 표명해야할 것이다.

다섯째, 기존 복지사업의 성과 제고도 동시에 고려해야할 것이다. 복지의 소관부서를 비롯한 타부서 소관의 복지관련 세부단위사업들은 약 300여개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등한시 할 수 없다. 민선 6기 약속사업 외에 기존 법적으로 규정한 사업 및 자체사업들의 성과평가를 통해 목표달성정도를 점검해야할 것이다.

한편, 한정된 자원 때문에 하드웨어중심의 복지확대가 치중하기 보다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에서 강조하는 아이디어를 복지프로그램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역 자율적으로 조직화하는 공동체를 지원하거나, 공공시설의 공간을 이용하여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구석구석 살피는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 V. 나오며

지금까지 민선 6기 복지분야 주요 약속사업의 특징과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복지분야 약속사업의 실천은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어 있다. 대체로 복지분야의 약속사업은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확충, 미래 복지수요의 대응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민선 6기 동안 약속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면 보다 발전된 복지도시의 모습으로 대전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약속사

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은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사업 우선순위의 설정, 자원조달의 실현가능성 확보, 사업성과 제고 등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민선 6기 복지분야 약속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전시, 지방의회, 사회복지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정책추진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민선 6기가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확충 및 기반조성에 관한 확고한 정책추진의지를 명확히 하고, 체감도 높은 복지수준을 만들기 위한 책임성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또한 개인주의를 벗어나 나눔과 배려라는 공동체 가치와 사람중심에 보다 중점을 두는 친복지 문화의 형성, 지속가능한 복지재정의 확보, 민관협력의 구축, 시민사회의 복지수용성 확대 등에 대한 노력과 함께 이에 대한 시민의 합의를 도출하면서 복지분야의 약속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대전광역시(2014a), 주요업무보고.
  - 대전광역시(2014b), 시민과의 약속사업 실천계획.
  - 대전광역시(2014c), 2014년도 지방재정공시.
  - 대전복지재단(2014), 시민복지육구조사 결과보고.
  - 대전시민경청위원회(2014), 권선택의 약속사업 실천방안-약속 그리고 선택.
  - 통계청(2012), 2012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